



북한은 우리의 무엇인가

세계가 화해 협력 시대로 치닫고 있으나 남북 관계는 답답하게도 이에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남쪽에서는 남북한간에 대화와 경제 협력을 서둘러서 인도적 차원의 쌀 무상 제공까지 했지만, 북측은 무장 공비를 남파하는 등 도만으로 응답했다.

경수로 협상이나 쌀 교섭 때만 해도 우리는 북한이 이제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현상 타개를 모색하려 보다' 하고 기대했다. 겉으로는 북한이 곧 문을 열고 남북한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틀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곧 그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쌀을 싣고 간 남쪽 배에 인공기를 게양케 했는가 하면 선원까지 간첩 혐의를 씌워 감금 조사하는 억지도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무장 간첩까지 남파했다. 최근 총남 부여에 침투했던 북의 무장 간첩이 우리가 한창 쌀을 보내던 지난 8월에 남파되었다는 것이다. 한 핏줄이라고 쌀을 보내고 있을 때 무장 간첩을 내려 보내는 도발 행위는 북한이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유훈통치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배하면서 신격화된 절대권력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한 지 1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북한에는 아직 국가와 당의 공식 지도자가 없다. 김일성을 여전히 체제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아 그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유훈통치'이다. 지난 1974년 2월

이종길

국민일보사 국제문제연구소장

북한 권력의 핵심중 핵심인 당 중앙 정치국의 정회원에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지만 그는 국가 기관인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북한을 장악하고 있을 뿐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도 아니고 당의 수령인 총비서도, 당군사위원장도 아니다.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권위가 없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북한 언론 공동 사설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충직한 후계자"라며 "당을 강화하고 김정일 동지의 영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김정일 동지는 혁명 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을 지니고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김정일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어느 모로 보아도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김정일은 대내 정치에서 '노동당은 김일성의 당', '김일성은 곧 김정일'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북한 사회를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유일적 영도' 하에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고 '혁명적 규율과 질

서'를 바로 잡아 '당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는 외침은 김일성 시대와 조급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외·대남 정책도 유혼에 따르는 마찬가지다. 김일성이 생전에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것이 지금도 북한의 정책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북한은 그들의 체제 및 정권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네바 북·미 합의도 '위대한 수령'의 유혼이 거둔 승리라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김일성 생전에 시작돼 그의 사후 약 석달 뒤 타결된 북·미 핵합의가 외교 고립과 경제난에다 지도자마저 사망해 정권 수립후 최악의 상황에 몰린 북한을 살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 합의를 통해 북한은 중유 공급과 경수로 지원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쟁김과 동시에 미국과 대화 채널을 확보해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 한반도 문제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 개가까지 올렸던 것이다.

남북 관계

북·미 핵타결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지금은 북한이 남쪽 배세 전략으로 대화를 거부하

고 있지만 대화없이 경수로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는 남쪽의 기술, 인력, 자금이 북한을 오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선언했다. 그동안의 북한 핵문제와 경제 협력 관계를 철폐하고 대북 압력 일변도의 강경 자세를 협력과 동반자 관계의 포용 자세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선 예견되는 한반도 해빙과 함께 동북아의 기류 변화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였다. 핵타결로 북미 관계 개선이 급속히 진전될 것이고 북일 수교 협상도 빨라질 가능성도 높았다. 이들 나라의 대북 경협 사업도 촉진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 상태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남쪽의 대북 전략도 틀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접촉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의 활성화는 이산 가족 재회와 문화 체육 교류는 말한 것도 없고 정치적인 협력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이다. 대북 경수로 원전 건설 지원에 남쪽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분

명히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직결될 '민족 발전 공동 계획'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과 대남 경제 발전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북한은 경험이 남한에 의한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중요한 대목마다 북측이 실제와 현실을 부인하고 대화와 협력을 외면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최근 동족애를 발휘하여 아무런 조건없는 쌀지원 문제의 논의에서조차 남쪽 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우회 경로와 민간 기구 통로를 고집하며 모든 것을 오직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하려고만 했다.

남북 경협


북한의 최대 약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다. 북한 경제는 지난 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1990년 이후 5년 연속 경제 후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자본재 및 부품의 공급 중단과 농업 생산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삼재(三災)로 불리던 식량, 에너지, 외화 부족 문제가 가운데 가

장 심각한 것이 식량난이다. 북한은 산이 많고 경지가 적어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데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고 외환 부족으로 수입도 어려워 오래 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식량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의식주'를 '식의주'라고 부를 만큼 '먹는 문제' 해결에 최대의 정책적 관심을 두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 특구에의 외화 유치 등 경제 개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 건설과 금융 산업 유치 및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소 설치 등 증권 시장 도입 의지까지 밝힌 바 있다.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념의 굴레를 웬만큼 벗어 던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구소련의 붕괴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상황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단기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조평통(祖平統)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애써 외면해 온 기본합의서의 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협협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남쪽 경제인들이 북측과 구

체적으로 합작 투자에서부터 기술 제공, 공장 건설 등에 관해 오래 전에 합의해 놓고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 경제난을 벗어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춘 지 오래다. 이렇게 남북한 모두가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공존 공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새 체제를 정돈하지 못한 북한이 민간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간 협력을 반대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쪽의 어느 누구도 북한이 경제 파탄으로 체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붕괴되는 등의 돌발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경제 수준의 격차가 너무 커 남북 7천만 주민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당장 북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 협협이다. 지난해 남북한 물자 교역 반출입 승인 실적은 2억 2천 7백 91만 달러로 1993년에 비해 14.5%나 증가했다. 북한은 더이상 정치적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속있는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남북한 경제 교류는 빠를수록, 또 확대될수록 민족 화해와 번영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남쪽을 무력 통일의 대상이 아닌 좋은 경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漫評〉 ⑪



“계절 탓인가 또 찬바람이...” 